

“캄보디아, 범죄수익이 GDP 절반… 韓 가담자 약 2000명”

〈약 125억 달러〉

2025 국감

국정원, 범죄 실태·대응계획 설명
자국민 스캠범죄자 재가담 가능성
유관기관과 출국금지 등 대응책 마련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강남학원 마약사건 총책으로 확인

국가정보원이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박선원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를 후 기 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파악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실태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박선원 여당 간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진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단지는 프놈펜(수도),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고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만큼 비중이 크다”며 “캄보디아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국민 중에서

도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우리 국민의 범죄 연류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음료를 학생에게 쥐이를 빌미로 부

모에게 금품을 갈취한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란 보고도 있었다.

이성권 야당 간사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국정원은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주범을 확정했고 현재 추적 중에 있다”며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체포를 위해 추가 전담반을 파병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자국민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국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는 법무부 출국 금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외교부의 자국민 피해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영사가 120억원 대 스캠 범죄를 일으킨 한국인 주범이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음에도 자수만 권유하고 돌려보낸 것을 두고 “자수할리가 있나”라며 아연실색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당시 경찰영사의 판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 체포 성격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잠적해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또 피해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대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범은 캄보디아 경찰 기관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송환도 ‘그게 구출이나’, ‘범죄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한편으론 감금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송환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해자성이 크든 적든 본국에 송환해서 필요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미분양 아파트 지역, 신혼부부·청년 찾아 목소리 듣겠다”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
10·15 부동산 대책 공세, 철회 요구
실수요자·민간 중심 공급대책 마련

국민의힘은 22일 장동혁 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많은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번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



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

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제가 특위에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

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며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10·15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과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냐”라며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마라”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진성준 “집값 잡기 위해 ‘보유세 개편’ 용기 내야”

강력한 금융·수요관리 대책과 수반
‘똥똥한 한 채’ 집중현상 문제 손봐야
민주당 부동산TF, 세제개편 논의 없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대출 규제책 위주로 발표됐었다. 진 의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검토했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적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 선거상의 유희리의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냐”라며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과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생각과 달리 당 부동산TF 단장을 맡은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

런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룰데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의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똥똥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똥똥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손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집값

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력한 금융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세제조치, 특히 보유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똥똥한 한 채’로 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안정화TF’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에 모든 힘을 모으겠다”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누구나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